

1. 개 요

□ 일시/장소 : 2021. 9. 15(수) 14:00~16:00 / 농특위 대회의실

□ 참석자 : 총 23명(분과위원 17명 등) ※ 영상 병행

- (분과위) 김향자 분과위원장, 구자인 위원, 강정현 위원, 박주영 위원, 성주인 위원, 이은영 위원, 이정화 위원, 장효천 위원, 조미형 위원, 강동화 위원, 김승철 위원, 김태완 위원, 김호연 위원, 서봉석 위원, 최무열 위원, 최범진 위원, 황길식 위원
- (사무국) 임성규 팀장, 임정우 사무관, 이강호 전문관
- (관련기관) 박수선 지도관
- (연구진) 정지영 부장, 이재호 교수

□ 주요 내용

- 정책연구용역 추진보고 및 논의
 - ① (농촌사회혁신)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 ② (농촌사회혁신) 농어촌 유희·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 ③ (농촌정책혁신)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2. 회의결과

□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 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복지 전달체계를 고려하여 농식품부 역할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11월 중) 개최

□ 농어촌 유희·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 녹색 농촌 체험마을 등 2002년 이후 정부지원 시설물을 조사하고 농어촌 유희·저이용시설의 개념 및 기준 마련과 제도화 개선방안 제시

□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점검을 위해 5대 정책분야*를 선정하고 7대 세부과제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을 현장토론회를 통해 점검** 예정이며, 현장토론회 시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 농어업회의소, 농촌협약, 어촌뉴딜300

** 4대 주요 의제 및 7대 세부과제에 따른 14개 분석항목을 참고하여 점검

3. 향후 일정

□ **민관협치형 농어촌정책 추진체계 1차 현장토론회*(10.1.금)**

* 주제 : 농식품부 신활력플러스사업과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구축

□ **농어촌 사회혁신소분과* 회의(10월말)**

*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농어촌 유희·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 **농어촌 정책혁신소분과* 회의(10월말)**

*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 **농어촌 돌봄서비스 정책 방향과 과제**

- (조미형 소분과장) 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복지 전달 체계 등에 대한 이해와 맥락 속에서 농식품부의 역할 및 제고 방안을 고려한 의제 도출 필요
- (서봉석 위원)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한 방안* 검토 필요
 - * 복지 담당자의 지속적인 방문 및 신고를 통한 인센티브 포상 제도제 등
- (김태완 위원) 복지부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관련 논의를 참고 하여 부처 제안 검토 필요
 - * 노인 관련하여 복지부 인구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의 복지정책과에서 담당
- (이은영 위원) 대상지 선정 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잘된 사례 뿐만 아니라, 접근이 어려운 지역 추가 선정 제안
- (김승철 위원) 열악한 지역의 대표적 사례로 섬*지역을 꼽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지 선정 검토 필요
 - * 한국농어촌연구원 어울림사업 내용 중, 섬 지역 인터뷰 보고서 기반
- (구자인 위원) 연구과정 중 서비스 전달체계 재편 시 현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염두 필요
- (강정현 위원) 돌봄 관련 복지부, 농식품부 예산 현황 파악 필요
- (이정화 위원) 지속적인 사업 개선을 위해 복지부와 농식품부 협력이 중요하며, 추후 정책사업 대상 고려 시 민간 협의체 조직* 활용 제안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한 돌봄 사각지대 대상자 유형 분류 실시 참고
- (박수선 지도관) 농촌진흥청의 치유농업 사업 프로그램을 노인 맞춤형돌봄서비스에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농어촌 유희·저이용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

- (이재호 교수) 녹색 농촌 체험마을 등 2002년 이후 생겨난 시설물 및 폐교 등 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며, 유형화를 통한 활용방안 제시
- (구자인 소분과장) 유희시설에 대한 법·제도에 대한 논의* 필요
 - * 현재 농식품부 지침 및 협약을 통한 무상 임대로 처리되고 있으며, 법·제도의 미비함으로 인해 여러 문제 발생 중
- (황길식 위원) 주민, 지역사회, 지자체 입장에서의 법·제도 등 한계 및 대안 제시* 필요
 - *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론화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첫 시작을 위해 농특위에서 해당 과제에 대한 의제화 필요
- (박주영 위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행정 서비스 공급 및 체계 등 고려
- (성주인 위원) 시설 활용방안 아이디어를 위해 대상지 선정 과정에서 특정 사례 중심으로의 접근 필요
- (김호연 위원) 유희시설의 시설 전환에 필요한 규제 개선 방안 등 고려

□ 지자체 농어촌정책의 민관협치형 추진체계 요인 도출 및 정책 개선과제

- (구자인 소분과장) 본 연구는 현장토론회를 통해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농특위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며, 현장토론회 시 위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당부
- (이은영 위원, 박주영 위원) 5개 정책사업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점검 사항 필요
- (구자인 소분과장)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과 도시 청년들이 현장에 연결될 수 있는 추진체계와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조례 등 근거 마련 필요